

월간 기업경제

HRI Business Economics

08 1993 AUGUST

월간기업경제 / 등록번호: 라-6125 / 등록일자: 1993년 7월 8일 / 발행일자: 1993년 8월 2일 / 발행 및 편집인: 배성동 /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주소: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62 호 / 전화: 784-6545~9, FAX: 784-6583 / 인쇄소: 서울컴퓨터 인쇄사

Editor's Column

3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 / 정순원

Current Issues

7

정부 규제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규제 완화 / 이승철
정부 정책 실패의 최소화 민간 참여로 / 김선덕

Special Feature

12

해외 기업의 환경주의 경영 / 최주섭

Macro Perspective

26

최근 환율 변동의 특성과 전망 / 한상완
설비투자는 늘지 않는다 / 유병규
2단계 금리 자유화와 금융 시장 / 손영기
증시 동향과 전망 / 박종곤

Industry Report

49

세계 공작 기계 산업의 최근 동향 / 류재현
대기업 그룹의 특허 기술 출원 동향 / 심재철

Country Report

63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 한·미 통상 관계 전망 / 최인범
재도약하는 중남미 경제 / 서동혁
「55년체제」 붕괴 후의 일본 정치 / 이정만

Societal Trends

80

기업도시의 기업과 주민 / 박태일

Management Strategy

88

관리자 관리의 열가지 신화 / 전성용

HRI Post

96

Statistics

97

회원사용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

鄭淳元*

하반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제 성장률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침체 국면을 막 벗어난 상태로 인식된다. 92년 4/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2.8%, 금년 1/4분기에 3.3%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2/4분기에는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하반기 성장률도 전망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내외는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기의 흐름이 예년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7월 21일 현재 에어컨이 31만 대가 팔렸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 40만 대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며, 92년 판매 실적 35만 대보다도 적은 양이다. 경기 침체가 오래된 탓인지 피서지 경기도 한산하다. 관광협회 자료에 의하면 호텔 객실 점유율이 91년에 64.3%이었던 것이, 92년에는 62.6%, 그리고 작년 8월에는 67.4%를 기록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후 정부는 실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경

제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으려 했다. 금년 상반기 통화 공급 증가율은 17.6%를 차지하였고, 재정 지출은 첫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다. 인플레이 압력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인플레이 불안만 가중시키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크다. 앞친데 뒷친격으로 한달 이상 지속된 노사 분규로 실물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늘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제조업의 재고가 5월 이후 뚜렷이 감소하고 있어서 경기 회복의 징후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재고는 금년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 전의 19.2% 증가보다 현저히 감축된 것이고 88년 4월의 3.2%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금속, 사무용기기, 수송용기기, 화학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고 있지만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상반기에 2.3%에 머무르고 있고, 제조업 가동율도 상반기 78.5%로서 작년 연간 평균 가동율 79.6%에 미치지 못하여서 산업 생산이 작년 하반기의 침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 研究委員, 美國 인디애나大 경제학 박사, 국제 금융·거시경제이론분야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설비 투자가 매우 부진하며 그 선행 지표인 기계류 수입 허가액이나 기계류 내수 출하가 상반기에 10%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91년 이래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실업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9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각각 9.3%, 6.2%였는데 92년에 6.2%, 2.4%를 그리고 현재 4.8%와 3.0%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필립스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실물 경제 난맥상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국제 경쟁력의 위축이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위축시킨 원인으로서는 기술 발전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임금이 지난 2~3년간 노동 생산성을 앞질러 급격히 상승하였고, 금리가 경쟁국에 비해 2~3 배나 비싼데다가 경제 주체들 간에 경쟁하려는 의지마저 약화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제품에 노동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제품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제품에 시장을 내주는 이른바 '샌드위치형 수출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급 소비재는 개방된 국내 시장에서 젊은 소비자 계층에 의해 점차 외면당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 경쟁력의 약화가 회복되지 않는한 비록 거시 경제 흐름상 경기가 저점을 벗어났다고해도 경기 회복의 강도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이다.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서 단독 주택 건설이 늘고 주거용 건물 건설은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비주거용 건물이나 사회간접 자본 건설이 여전히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외로 매우 완만하여 수출 시장의 확대를 단기간 내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투자 부진의 원인에 일조하고 있으며, 투자 부진은 다시 역으로 경쟁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는 경쟁력 위축이 기술 제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얼마전 어떤 공공 기관에서 바이어를 상대로 한국 제품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수출 제품 시장을 유린하는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출 가격 결정, 마케팅, 그리고 애프터서비스 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에게 뒤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지적을 한꺼풀 더 벗기면 세계 12위 수출 국가에서 아직도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해 준다.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해

외 고객들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수입 시장이 최근 다소 위축되고는 있지만 우리 경쟁국들은 그런대로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제품만 이들 시장에서 밀려 나오고 있는 현상은 이같은 지적 이외 다른 설명 요인을 찾아 내기 어렵다.

끝으로 국민 경제가 아직도 인프레 체질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통화 발행을 더 늘려 유효 수요를 부양시켜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경제 주체들의 인프레 기대 심리가 매우 높을 경우에 정부의 경기 진작 정책은 수요 부양 차원을 넘어서 물가를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고 쉽게 금리를 상승케 한다. 금년도 물가 상승 폭은 전년 수준보다 1.5% 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정부의 경기 대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또한 통화 증가율이 18%에 육박하고 있지만 산업 생산 증가율은 5%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서 내년 이후의 물가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고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의 인하 유도는 금융 기관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신 금리의 인하 유도는 여유 자금을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 회복의 관건

우선 단기간내에 경제 호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경제하려는 의지의 소생이라고 본다. 기업가는 미래가 불투명해도 진취적인 투자 자세를 되살려 주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이상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같은 노력은 경제 주체들 간에 심리적인 효과를 대단히 크게 가져와 경기 회복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상품의 견본을 보내는 것부터 애프터서비스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으로 떠나갔던 해외 바이어들을 다시 끌어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기술의 진보 없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실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인프레 체질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억제보다는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의 갭을 쉽게 유발시키는 유통 구조의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유통 경로에 있음을 간과하고 인프레 개연성이 높다고 하여 거시적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려 드는 일은 오히려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끝으로 금리 수준을 더욱 하향 조정해 주어야 한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5.6% 내외로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6%로 볼 때 금리가 적정 최대 수준이랄 수 있는 11.6%를 상회해서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반기 실세 금리 수준이 13~14%로 예상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같은 단기 과제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상반기 경제 실적을 감안할 때 '93년 전체로 경제성장률이 6% 가깝게 달성되려면 민간 소비 지출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설비 투자가 8% 가까이 늘어나야 하며 수출 증가율을 8%를 소폭 넘어서야 한다. 상반기 설비 투자 증가율이 -7.3%였고 수출은 6.4%였다. 따라서 설비 투자가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수출은 다소의 경쟁력 회복을 이용하여 미국·유럽 등의 경기 회복을 심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용주의로

결국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 경제보다 다소 나은 모습을 갖게 되겠지만 활황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갖게 된다. 수출은 정부의 독려와 민간 업계의 노력에 달려 있겠지만 8% 이상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상반기 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여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 처방을 제시하는 케인즈의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케인즈는 정부가 투자 역할을 떠맡던지 아니면 민간 부문이 그러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기 부진으로 세수 실적이 저조하여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출

이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단기적인 재정 적자 확대에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 만일 적자 재정이 부담스럽다면 민간 부문 스스로 투자 확대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최근 노동 정책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 정책과 같이 실물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이상론에 치우쳐도 안된다.

이같은 조건이 100%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7%대에서 6%대로 하향 조정될 수 밖에 없고 연간으로도 낮은 5%대로 위축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가 연간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 상반기 금융 완화의 효과가 아직 현재화 되지 않고 있고 6월말 현재 4.2%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나친 경기 부양책은 94년도 경제 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단순한 경기 회복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에너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모아 주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려 든다면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경제 구조 개선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 차원에서 출발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의 틀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다. ♣